

제2장 남북대화의 다양화 · 정례화

제1절 남북정상회담

1. 개최 배경 및 준비접촉
2. 회담 내용 및 「6·15 남북공동선언」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제2절 남북특사회담

1. 북측 특사 방한
2. 남측 특사 제1차 방북
3. 남측 특사 제2차 방북

제3절 남북장관급회담

1.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2.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3.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4.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5.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제4절 남북군사분야 회담

1. 남북국방장관회담
2. 남북군사실무회담
3. 남북군사실무접촉

제5절 남북경제분야 회담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3.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4.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5.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6.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7.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8.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제6절 남북 인도·사회분야 회담

1. 제1~3차 남북적십자회담
2.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
3.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제2장 남북대화의 다양화 · 정례화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이래 남북당국간 직접대화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각종 분야별 남북대화를 활발히 개최하며 이를 정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남과 북은 정치, 군사, 경제, 적십자, 체육 등 분야에서 총 76회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다자간 회담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과 남북간 비공개 접촉을 포함하면 총 85회에 이른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1999년도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준거 틀로서 우리측이 강조한 ‘상호주의 원칙’을 북측이 거부함에 따라 회담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 기간중 적십자대표접촉(‘98.3.25~27), 당국대표회담(‘98.4.11~17), 차관급 당국회담(‘99.6.22~7.3간 2회) 등 13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대화는 다양하게 또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1999년 4월~6월, 남과 북은 베이징 비공개 접촉을 통해 새롭게 대화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에 발생한 연평해전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그 직후에 차관급당국회담이 열렸으나 아무런 결실을 이루지 못한 채 남북관계는 전반적인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3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화해협력선언」(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 회복 지원 ▲한반도냉전 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기본합의서 이행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 개최 등을 천명하였다.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서도 우리 정부가 2년여 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대북화해협력정책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북한 측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오게 하는 계기를 조성했다.

베를린 선언 직후 남과 북은 베이징에서 3차례의 특사접촉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남북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축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회담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의 세부 실천사항들을 이행하고 남북간 현안 문제를 협의·해결해 가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가고 있다.

한편,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서해교전 등의 영향으로 남북대화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남과 북은 상호 신뢰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꾸준히 대화통로를 열어가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화해협력정책이었다.

제1절 남북정상회담

1. 개최 배경 및 준비접촉

가. 개최 배경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것으로서, 당장의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는 남북정상이 만나 민족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우리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2000년 3월 9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화해협력 선언」(베를린 선언)을 천명하였다.

베를린 선언은 남북간 평화공존이 실현가능한 대세가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①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 회복 지원 ②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 ③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④ 남북 당국간 대화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실천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으로서,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베를린 선언이 나온 직후 북측은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특사접촉을 제의하고, 이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북측의 제의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특사로 임명하고 북측 인사와 접촉케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위한 남북간 첫 특사접촉은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첫 접촉 이후 실무급에서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남북의 특사는 베이징에서 3월 23일 또 한차례 접촉을 가진 다음, 4월 8일 최종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0년 4월 10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00년 4월 8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나. 준비접촉

「4·8 남북합의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이 판문점에서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례 개최되었다. 이 접촉에는 우리측의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와 북측의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를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판문점에서 개최된 것은 199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었다.

제1차 준비접촉(4.22, 평화의 집)에서 우리측은 대표단 규모, 정상회담 형식, 회담의제, 왕래수단 등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 안

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북측은 절차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제의를 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에 관한 원칙적 입장만 제시한 후, 토의과정에서 우리측 제안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차기 접촉에서 제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제2차 준비접촉(4.27, 통일각)에서 쌍방은 절차문제 전반을 광범위하게 논의,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측은 정상회담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 안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가장 쟁점이 되었던 의제 문제와 관련, 북측은 4·8 합의서의 표현을 인용한 포괄적 의제를 제시하였다.

제3차 준비접촉(5.3, 평화의 집)에서 쌍방은 절차문제에 관한 합의서를 조항별로 협의하여, 수행원 규모(130명), 정상회담 횟수(최소 2회 이상), 왕래수단(항공로·육로), 편의보장 등 상당 부분에 합의하거나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북측은 제2차 접촉에서 기자단 규모를 80명으로 제시한 우리측 안을 수용하였으나, 제3차 접촉에서 30~40명 선으로 후퇴한 안을 제시하였다.

제4차 준비접촉(5.8, 통일각)에서 쌍방은 절차문제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회담 의제, 기자단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포괄적인 의제로 하자는 데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기자단 규모에 대해 북측은 40명 선을 고수하였다.

쌍방은 제4차 준비접촉과 제5차 준비접촉 사이에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제5차 준비접촉(5.18, 평화의 집)을 통해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준비접촉의 과정에서 남과 북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정상회담 의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타결하였다. 이러한 의제 채택은 남북정상회담의 목적과 우리 민족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는 의미가 있었다.

준비접촉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최소 2~3회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정상간 논의의 기회가 최대한 마련되었다.

또한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간 위성통신망을 구성·운용하기로 하였고, 우리측 인원과 장비로 직접 촬영·제작한 TV 실태방송을 북측의 협조를 통해 위성중계 함으로써 7천만 겨레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2. 회담 내용 및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는 선발대 30명을 포함하여 수행원 130명, 기자단 50명이 참가하였다. 수행원은 공식수행원 11명, 특별수행원 24명, 일반수행원 95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전용기 편으로 서해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지도급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공식 환영행사 참가에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며 환담을 나누었고,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 직후 회담을 가졌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4일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기간중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최고당국자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한다는 입장에 따라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협

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이 대결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북간에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에 구호나 원척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두 정상의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여 6월 15일 발표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요지>—

- 나라의 통일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감.
-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

남북공동선언은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최고당국자가 합의, 서명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공동선언에서의 표현된대로 남북정상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원칙적 합의를 양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합의·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의 커다란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변4국의 이해와 협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당사자인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 제3국(인)의 개입이나 중재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당국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구축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기술자·근로자의 접촉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두 정상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상회

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이끌어냄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쌍방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의미로 강조될 만하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국민의 정부」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초기의 의구심을 버리고 당사자간 대화에 응했기 때문이다. 즉 남과 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각종 회담의 다양화·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교류의 활성화와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 진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한 것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남북간 합의에 대해 우리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에 폭넓은 신뢰를 심어 주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남북특사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는 총 3차례의 특사 파견이 있었다.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가 2000년 9월 1차례 우리측을 방문했고, 우리측 대통령 특사가 2002년 4월, 2003년 1월, 2차례 방북했다. 특사는 정상의 뜻을 전달하고 의견교환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동안 남북은 3차례 특사 파견을 통해 그 당시 당면해 있던 제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당시 다소 정체되어 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계속 이어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북측 특사 방한

북측 특사 방한문제는 2000년 8월 우리측 언론사 사장단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기하고, 2000년 9월 1일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방북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북측 특사의 남한 방문은 추석 직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이 접근되었으며, 구체적 일정은 9월9일 남북연락사무소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북측의 김용순 특사, 박재경 인민군 대장 등 8명은 2000년 서해 직항로를 통해 9월11일부터 14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였다. 북측 박재경 대장은 9월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석선물로 남측에 보낸 송이버섯 3,000kg을 전달한 후 바로 귀환하였다.

김용순 특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박재규 통일부장관,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역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문제, 이산가족문제, 남북회담 일정 등 남북간 제반 현안문제를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한편, 김용순 특사 일행은 제주도 및 경주를 방문하고, 산업시설인 포항제철 등을 시찰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발전상과 관광산

업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 <북측 특사 방문시 공동보도문 요지> —

1.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2.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해 환영
3.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교환을 우선 추진
 - 9.20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 교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협의
4. 남북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타결을 위한 남북경협실무접촉을 9.25 서울 개최
5. 빠른 시일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개최
6. 15명 규모의 북측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
7.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남북공동조사 실시

2. 남측 특사 제1차 방북

우리 정부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실없이 끝난 이후 조성된 남북관계 소강국면을 해소하고, 미·북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세를 폭넓게 고려하여 2002년 들어 특사 파견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는 정부가 남북간 현안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서는 다른 회담 형식보다도 특사 파견이 적절하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 3월 북측이 우리측 특사 방북을 수용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원 대통령 특보를 특사로 임명하였다. 임동원 특사를 비롯한 우리측 일행 7명은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2000년 4월 3일 평양에 도착, 3박 4일간 머물렀다.

특사는 체류기간 동안 김정일 위원장 면담,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의 회담 등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4월 4일 임동원 특사는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5시간에 걸쳐 남북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특사는 한반도 정세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특사는 무엇보다도 정체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남북관계가 계속 정체될 경우 한반도 긴장국면이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이미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과 남북간 군사당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북·미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이로 인해 또 다시 위기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와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였다. 그 결과는 미국 특사의 방북 수용, KEDO와의 협의 재개, 민간차원의 대미 교류 추진 등 미국과의 대화재개 수용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위원장은 또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사 방북은 당초 4월 5일까지 2박 3일간 예정되었으나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하루를 연기하면서 공동보도문에 대한 마지막 문안 조정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경제시찰단 방문,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동해선-서해선 철도·도로의 조속한 연결에 합의하는 등 총 10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특사는 4월 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였다. 당초에는 방북할 때처럼 서해 직항로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육로를 통한 판문점 귀환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동안 판문점 지역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에 비추어 이례적인 조치였다.

<우리측 특사 방북시 공동보도문 요지>

1.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2.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관계를 원상 회복
3.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
4.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 적극 추진
 - ①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를 5.7-10까지 서울에서 개최
 -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
 -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금강산 당국회담을 6.11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28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 ④ 북측은 경제시찰단을 5월중 남측에 파견
 - ⑤ 합의사항 이행과 진척에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5.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
6.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

3. 남측 특사 제2차 방북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력 외교를 전개하였다.

2002년 10월 로스카보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2003년 1월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에 특사를 파견하는 한편 미국에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을 보내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입장조율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1월 10일경 북측에 특사 파견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기간(2003.1.21~24)중 북측은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 옴으로써 1월 24일 남과 북은 대통령 특사의 방북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 <대통령 특사 방북 관련 발표문> —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1월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을 대표해서 이종석 인수위원이 함께 간다.

이번 특사방문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현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며, 임성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등이 수행한다.

대통령의 특사 방북은 2003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다.

특사 일행 8명은 2002년 4월 방북시의 전례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이용하여 방북, 귀환하였다.

특사는 체류기간 동안 대통령의 친서를 김용순 비서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했으며,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 현안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방에서 중요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사정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리측에 양해를 구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 내용을 전달해왔다.

김정일 위원장은 "대통령님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특사를 보내 따듯한 조언이 담긴 친서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언급하고 이 말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 임동원 특사는 방북기간 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사는 북측이 취한 핵 관련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가 모두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핵의혹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과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다. 또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측이 보다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NPT 탈퇴 선언 철회,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 복구 등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농축우라늄 계획 의혹의 해명과 이의 폐기를 선언할 것을 설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대화에 들어갈 것을 권고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측은 우리측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우리측 설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추후에 연락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이제까지 밝혀온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주장하였다. 즉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는 개발할 의사도 없다”, “이를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용의가 있다.”, “핵문제는 북·미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한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쌍방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우리측이 남북 군사당국간에 군사분계선 통과문제가 해결된 만큼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를 촉진하여 2월에 완료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북측이 동의하였다.

우리측은 차기정부도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며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북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당선자측 대표인 이종석 인수위원은 당선자측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핵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제2절 남북장관급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5항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서울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2003년 1월까지 남북을 오가면서 9차례 개최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사항들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현안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분야별 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는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남북 쌍방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대화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2000년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실천 결의행사 개최,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문산-개성간 24km구간 연결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두 차례 추가 실시 등 7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신규도로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등 5개항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북측에 촉구하고, 모든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실현, 남북간 직항로 개설, 말라리아 공동방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및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 2회 추가 교환,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실무협의 개최,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 4개항을 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각기 제기한 의제를 놓고 협의한 결과,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두 차례 추가 실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공동추진,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기로 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합의사항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석달반 동안 이루어진 일들은 크게 보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협력사업 이외에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매 회담시마다 많은 합의를 내기보다는 이미 합의한 협력사업들의 이행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 양측은 세부 의제에 대한 다소의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남북간 합의사항들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의 조속한 타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문제를 차기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하였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제3차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진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결산하고 2001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부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업들의 추진일정을 조정,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차 장관급회담시 양해가 이루어진 사업 등을 협의·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은 남북간 전력협력문제, 남북어업분야 협력문제, 남북태권도 통합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2000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전력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경협관련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북측의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추진일정을 재조정하고, 어업부문 상호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남과 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제4차 회담에서 합의된 일정보다 6개월이나 연기되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쌍방은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등에 합의하는 등 경협분야 9개항을 포함한 총 13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이 회담을 통해 우리측은 지난 3월에 개최기로 합의했었던 제5차 장관급회담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이를 연기하였던 점과, 북측 선박이 우리측 영해를 무단 통과한 사건, 그리고 8·15 남북공동행사 진행과정에서 일부 방북단의 ‘3대현장 기념탑’ 앞 행사 참석과 돌출 발언으로 물의가 빚어진 사실 등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2001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틀 연장되어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9.11 테러사태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제5차 회담 합의사항들의 이행일정을 재조정하며, 남북간 대화국면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조치에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5차회담

합의사항 이행일정의 재조정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경계강화조치가 9.11 미국내 테러 사건 이후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취해진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남북간 여러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공조 등 우리측의 외교활동은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남과 북이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받을 때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3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접촉, 실무접촉 등을 통해 12월초 4차 이산가족방문단 상봉, 제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 등에 의견접근을 이끌어 냈으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장소, 제7차 장관급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회담이 종료되었다.

2.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북측은 2002년 7월 25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북측은 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사이에 합의한 남북철도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5 특사 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밖의 관심있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하여 8월 초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가지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7월 30일 정세현 수석대표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여 북측이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장관급회담대표 2명을 포함하여 적절한 실무인원을 금강산에 보낼 것임을 표명하였다.

북측이 당일 회신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측 제의를 수락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봉조(통일부 정책실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 표	서영교(통일부 국장)	김만길(문화성 국장)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은 2002년 6월 29일 서해사태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우리측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측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서해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고 더 이상의 논쟁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 쌍방은 수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제7차 장관급회담 일정과 의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하여, 분야별 회담 일정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안을 타결하였다.

—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

1.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002.8.12~14 서울 개최
2.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아래 사항을 협의·해결
 - 4.5 공동보도문 이행 일정 확정문제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문제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등 경제협력문제들을 토의)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문제
 -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
 -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
 -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실현문제
3.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 북측 참가
4.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 적극 지원

3.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2년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7차 회담에는 우리측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쌍방 대표단에 대폭적인 교체가 있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정세현(통일부 장관)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표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박문석(문화관광부 차관) 이봉조(통일부 실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조성발(내각사무국 참사)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춘근(민경련 서기장) 김만길(문화성 국장)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그 동안 남북간 합의가 많았으나 그 이행은 지지 부진하여 대내외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회담은 실천하는 회담,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를 금년 내에 연결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개최 ▲금강산육로관광 실현 등 관광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개최 ▲면회소 설치 및 서신교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제4차 적십자 회담을 개최 ▲추석을 계기로 제5차 상봉단을 교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임남댐 공동조사 문제 등 협의 ▲부산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8.15 서울민족통일대회, 남북축구경기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서해교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6.15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적십자회담, 금강산당국회담 등 각종 회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남북축구경기, 태권도시범단 교환, 경제시찰단 파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북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실무접촉을 수 차례 진행하여 4·5 공동보도문 이행일정,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간 핵심 현안의 실천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10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26~29 서울에서 개최
 -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그 밖의 경제 협력 문제 등을 협의
 -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동시에 병행 착공
2.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함.
 -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내 개최
3. 임남댐 공동조사를 실시, 이를 위한 관계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
4.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9.4~6 금강산에서 개최
 - 면회소 설치·운영문제 등을 협의
 - 이와함께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
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을 9.10~12 금강산에서 개최
6.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북측 참가와 성화 봉송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17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실무협의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
7. 9.6~8 서울에서 진행되는 남북축구경기에 적극 협력
8. 태권도 시범단 교환
 -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 평양 방문,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 서울 방문, 관계단체들간의 실무협의 주선
9.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남측 지역 방문
10. 제8차 장관급회담을 10.19~22 평양에서 개최

4.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제7차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10월19일부터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제7차 회담이후 2달여 동안의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감안할 때 제8차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제8차 회담을 이틀 앞둔 10월 17일,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8차 회담의 전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형성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간 화해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진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다른 현안에 앞서 제8차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최우선과제로 대두되었다.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합의한 일정을 하루 넘기면서 2002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회담 며칠 전에 제기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기를 시험·생산하지 않으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지 않기로 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핵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그리고 제네바 미·북 합의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측은 북한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합의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 유관국가 및 국제기구와 즉각 대화에 나서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핵문제 이외에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군사적 신

외구축 문제를 논의할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을 중점 제기하였다.

북측은 핵문제는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로 남측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10월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은 우선 우리측 대표단이 김영남 상임위원장 일행과 공동면담한 데 이어,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간 단독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세현 수석대표는 최근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측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최근 제기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렇게 해야만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측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북한도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4박 5일간의 회담을 통해 남북 쌍방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화해협력의 이행 및 제도화 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결국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8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회담 기간중 「개성공단 법률관계자 접촉」이 4차례 개최되

었다. 남북 쌍방의 해당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한 임금 및 노무관리, 하부구조 개발과 지장물 철거, 토지임대료 문제 등을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

- 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
- ② 철도·도로 건설을 동시에 빨리 진척시키며, 1차적으로 경의선을 개성공단에, 동해선을 금강산지역에 연결
 - 동해선 철도 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 방향의 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
- ③ 개성공단 착공(12월중) 등 실무문제는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협의
 -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 설치
- ④ 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 금강산에서 개최
- ⑤ 통행합의서 채택문제는 철도·도로 처음 연결 시기에 맞추어 협의
- ⑥ 동해어장 개방을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에서 개최
- ⑦ 금강산면회소 조기 건설 및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지원
- ⑧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

5.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은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제9차 회담을 1월 중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9차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1주일 정도 연기된 일자로 수정 제의함으로써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제9차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수 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에 장애를 조성하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북측이 분명하게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핵동결 해제조치를 원상복구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이 2003년 1월 10일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으며, 이를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실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핵문제가 북·미간의 문제로서, 북·미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3박 4일 회담 기간 동안의 우리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에 대한 북측의 보다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경협문제와 관련해서는 철도·도로 연결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일정에 합의하였다.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을 4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도 장관급회담이 계속될 수 있게 되었다.

제9차 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교류협력사업의 계속 추진 그리고 차기 회담 일정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종료되었다.

한편 제9차 장관급회담 기간 중 북한이 우리측 특사 파견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측 특사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북측을 방문하였다.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24일
서 울

제3절 남북군사분야 회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과 북의 군사당국자들이 마주 앉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남북회담 역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첨예한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왔던 남과 북의 군사당국자들이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남과 북은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군사분야의 화해·협력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의 조속한 개최 협의’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후 우리측이 2000년 9월 11일 송이버섯 전달차 서울에 온 북측의 박재경 대장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동의하는 서한을 9월 13일 우리측에 보내옴으로써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조성태 국방부 장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차석 대표	김희상 국방부장관 특보(중장)	박승원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중장)
대표	김국헌 국방부 국장(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국장 이인영 합동참모본부 과장 (대령)	김현준 인민무력부 보좌관 (소장) 로승일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유영철 판문점대표부 부장 (대좌)

회담에서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 노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군사적 협력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를 주는 군사행동 금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5개항으로 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쌍방이 합의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우리측의 개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2003년 1월말 현재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
-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의 왕래 허가과 안전을 보장하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 구체적 세부사항 추진
- 남북 연결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
-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 중순 북한에서 개최

2. 남북군사실무회담

남과 북은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5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타결(2001. 2. 8)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하여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발효시키기로 하였으나 2001년 2월 11일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로 동 합의서의 서명 교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합의서 발효가 연기되었다.

합의서 발효가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새로이 동해선 철도·도로도 연결하기

로 합의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 8.27~8.30)에서는 2002년 9월 18일 이전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 유엔군과 북한군은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두차례 개최(2000. 11.17, 2002. 9.12)하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이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과 북은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2. 9.14, 평화의 집)을 열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하였다. 합의서 타결에 이어 남과 북은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9.16, 통일각)과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9.17, 평화의 집)을 통하여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켰다.

<< 제6~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덕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준장)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대좌)
대표	이명훈 1사단작전부사단장(대령) 박성규 합동참모본부 과장(대령) 이명훈 육군건설단 계획처장(중령) 서훈택 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배경삼 인민무력부(상좌) 김기복 인민무력부(상좌) 정창욱 인민무력부(상좌) 박기용 인민무력부(상좌)

발효된 합의서는 전문을 포함하여 총 6개조 4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요지> —

☐ 남북관리구역 설정

- o 기존 경의선 철도노반 기준, 250m 폭 설정

☐ 지뢰 및 폭발물 제거

- o 계절조건 고려, 작업 1주전 상호 연락, 지뢰제거 작업 동시 착수
- o MDL부근 쌍방 400m 근접시 남측 화,목,토/ 북측 월,수,금 작업

☐ 철도와 도로 작업

- o 쌍방 200m 근접시 남측 월,화,수/ 북측 목,금,토 작업
- o 공사 마감단계시 MDL 20m 월선 허용

☐ 공사현장 책임자간 접촉 및 통신연결

- o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군사실무 문제는 전화통지문을 통한 협의 원칙
- o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에 유선통신 2회선, 팩스 1회선 설치

☐ 작업장 경계 및 안전보장 대책

- o 안전보장을 위해 100명 이내의 경계병력 운용
- o 경계병력의 무장 : 개인화기, 개인당 실탄 30발로 제한

☐ 합의서 발효·폐기 및 수정·보충

- o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발효

3. 남북군사실무접촉

남과 북은 쌍방간에 합의된 「군사보장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 통일각과 평화의 집을 번갈아 오가며 2002년 10월 3일부터 2003년 1월 27일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관리구역 내 지뢰제거절차 및 검증 문제, 통신선 연결, 임시도로 통행 등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군사실무접촉에는 우리측은 김경덕 준장(1차~3차)과 문성묵 대령(4차~7차)을 수석대표로 한 5~6명의 인원이, 북측은 유영철 대좌를 단장으로 한 3~4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7차례의 접촉중 제1~5차 접촉(1차 : 2002. 10. 3, 2차 : 10.11, 3차 : 10.16, 4차 : 10.25, 5차 : 11.13)에서는 지뢰제거작업 및 검증문제, 통신선 연결, 철도·도로 접속지점 설정을 위한 공동측량 등 남북관리구역 안에서의 공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제6차 접촉(2002.12.23)부터는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를 논의하였다. 제7차 접촉(2003. 1.27)에서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및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 동안 북측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여 왔으나, '남북관리구역이 비무장지대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승인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기함으로써 북측의 정전협정 준수가 기정 사실화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요지>**

-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
-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
 -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
-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
-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

제4절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2000년에 3차례, 2001년에 3차례, 2002년 14차례, 모두 20차례의 경제분야 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제분야 회담은 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접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쌍방은 경제협력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2000년 11월 11일 제2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가서명하였다.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하였으나, 발효절차를 거친 문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2002년 12월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전력협력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2001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전력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성과없이 회의를 종료하였다.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00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

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2001년 1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월 3일 서명·교환하였다.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위원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위원장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제1부 위원장)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양성호(건설교통부 수송물류 심의관) 김해중(국무총리실 심의관)	박정성(철도청 대외철도협조 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조현주(민경련 참사)

* 제3차 회의시 우리측 양성호 위원을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위원으로 교체

우리측은 쌍방이 합의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를 9월 16일 양측이 동시에 착수하여 철도는 2002년 내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연결할 것을 제시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임시 도로를 11월말까지 연결하여 2002년 내에 개통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이를 위해 9월중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 9월중 양측 사업자간 실무협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과 공사 착수 이전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착공식을 9월중 양측이 각기 편리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이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및 실무협의회를 9월 중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에 대해 북측구간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자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양측 당국선에서 책임지고 실천하되 북측은 관련 특별법을 곧 제정·공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실무협의회는 경의선 임시도로 개통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되 북측은 임진강 상류 기상수문자료를 우리측에 통보하고, 임진강 유역 치산·치수를 위한 남측의 묘목 제공을 요청하면서 관련 실무협의회를 경의선 임시도로 완공이후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 쌍방은 수차례의 위원장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결과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임남댐공동조사 등에 관한 8개항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을 서명·교환하고, 「남북간 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요지>—

-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동시 병행추진
 - 착공식은 9.18 쌍방이 동시에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
 - 경의선 철도는 2002년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연결
 -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은 1차적으로 저진-온정리(철도), 송현리-고성(도로)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
 - 동해선 임시도로는 2002년 11월말까지 연결
 - 북측구간 철도·도로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남측이 북측에 제공
 - 군사실무회담은 9.18 전까지 개최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13~15 개최(금강산)
- ② 개성공단 2002년내 착공 및 10월중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개성)
 - 북측은 곧 「개성공업지구법」 제정·공포
 - 남측은 개성공단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
- ③ 임진강수방 현지조사를 11월중 착수 및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 개최(개성)
 - 북측은 임진강 상류의 기상수문자료를 남측에 통보
 -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용 묘목을 북측에 제공
- ④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16~18 개최(금강산)

- ⑤ 투자보장 등 4개 경제협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4개 합의서 후속조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⑥ 남측은 쌀 40만톤(차관방식) 및 비료 10만톤을 가급적 빠른 시간내 제공
- ⑦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 방문
- ⑧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1.6~9 개최(평양)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북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추진, 동시개통의 원칙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가야함을 강조하며, 남·북·러 철도상 회의의 조속한 개최와 이를 위한 3자 또는 양자간 실무자 접촉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건설 착공식을 12월 20일경 진행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기에 앞서 4개 경제협력 합의서를 동시에 발효시키며,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확인, 통행, 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 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남측 어민들의 북측 동해어장

이용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5일에 각각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선 최근에 대두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안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지점 확정을 위한 공동측량을 11월 13일부터 실시하고 공사일정표 교환 및 공사진행 현황을 통보할 것과 철도·도로 실무협의회를 11월 말에 개최하여 열차·차량 운행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개성공단건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3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때까지는 임진강 공동조사가 착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11월 말에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하고, 식량 분배와 철도·도로 자재·장비 사용과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북 쌍방은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해운협력 실무접촉 및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개최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초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에 서명·교환하였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요지> —

-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대책 강구
 - 11월중 공동측량 실시, 공사일정표 교환 및 공사 진행 상황 상호 통보
 -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실무접촉 11월 중순 금강산 개최
- ② 개성공단 건설이 12월 하순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
 -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 남측은 빠른 시일 안에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
 -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실무접촉 12월 초 개최
- ③ 해운협력 및 북측 동해어장 공동이용 관련 실무접촉 일정 합의
 - 해운협력실무접촉 11월 19일 금강산 개최
 - 북측 동해어장 공동이용을 위한 실무접촉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개최
- ④ 빠른 시일 내에 4개 경협 합의서 동시 발효 및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12월 중순 서울 개최,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등의 문제를 협의
- ⑤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
- ⑥ 제4차 회의는 2003년 2월초 서울에서 진행

2.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제1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제1차 회의는 2001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남북 쌍방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만 확인하고, 차기 회담을 2001년 10월 19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측이 9.11 미국내 테러 사건 이후 우리측이 취한 비상 경계조치를 들어 제2차 회의 개최 장소로 합의했던 설악산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면서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제2차 회의

2002년 4월 우리측 특사 방북시 합의에 따라 남북 쌍방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제2차 회의를 2002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2002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택룡(내각사무국 부장)
대표	김찬(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장) 정내삼(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장)	방종삼(무역성 부국장) 전종수(내각사무국 과장)

우리측은 먼저 동해선 임시도로가 완공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육로관광을 실시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에 상응하게 북측도 관광특구 지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관광객 확대를 위해 자율통행로를 확대하고 관광코스를 추가 지정하며, 장차 경의선 도로가 연결되면 개성지역으로 관광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1차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쌍방 당국이 책임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과 사업자간의 합의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1월중 육로관광을 실현하고 북측의 관광특구 지정 등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이에 북측도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그 결과 11월중에 육로관광을 시작하고 해로관광도 계속 활성화해 나간다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의 사업자들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당국간 협력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3. 남북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과 관련 2차례의 실무협의회와 3차례의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세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쌍방은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인도·인수 절차,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경의선 임시도로 접속점 및 계획고(計劃高) 등에 합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표	양성호(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이성한(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최진택(국토환경보호성) 김명렬(철도성 과장)

* 2차 실무협의회시 우리측 대표는 조명균·손봉균·이성한(1차 실무접촉시 이성환 빠짐. 2, 3차 실무접촉부터 우리측 양성호는 손봉균으로 교체), 북측 대표는 박정성·길원국·김창식(제1차 실무접촉시 박정성, 김철호, 김창식, 계봉환 참가, 제2차 실무접촉부터 계봉환 빠짐.)

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2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남북이 동시에 갖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9월 18일 11:00에 하되, 경의선은 남방한계선 제2통문 앞에서, 동해선은 송현리 통일전망대 앞에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북측도 착공식 시간·장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공사방법 및 절차와 관련, 군사분계선상 접속지점에 대해 우리측이 생각하는 평면 좌표 및 종단 계획고(計劃高)를 제시하고 북측 입장을 문의하는 한편, 비무장지대부터 우선적으로 시

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북측 연결구간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차관방식으로 공사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할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동해선 철도는 온정리~저진 사이 구간을 단선으로 연결하고, 동해선 도로는 고성~송현리 사이의 구간을 2차선으로 연결하자고 제의하였다. 한편 서해선 (경의선) 철도는 기존철길노선을 따라 개성역~군사분계선까지 15.3km를 연결하고, 서해선 도로는 개성공단 부지의 남쪽 경계선에서 철길노선 우측(우리측: 좌측)을 따라 4차선으로 건설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철도·도로 접속지점은 쌍방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한 곳으로 하며, 북측 구간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설비는 1차분을 9월중에, 나머지 전량은 2002년 안에 제공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7차례에 걸친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의견접근을 보고,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및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하였다.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요지>**

- 9.18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 개최하며,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1일전 상호교환
- 철도는 단선, 경의선 도로는 4차선으로 연결하고, 동해선 도로는 2차선으로 연결하되 12월초부터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함.
- 철도·도로의 접속지점은 쌍방군사당국이 합의한데 따라 공동측량을 거쳐 결정
- 철도 분계역은 비무장지대 밖 자기측 구간 편리한 위치에 각기 건설
- 연결공사에 필요한 1차분 자재·장비는 9월안에, 나머지는 공정에 맞추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북측에 제공
-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열차와 차량의 운행문제 등 협의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요지>

-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 30년으로 하며 이자율 연 1.0%
- 남측은 1차분 자재·장비를 9월안으로,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
- 차관금액은 남측의 자재 실구매금액 및 장비의 실구매금액 또는 임대료 등을 합산한 금액
- 자재·장비의 인도·인수를 위해 남측은 인도회사를, 북측은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
- 북측은 자재·장비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
- 북측은 필요에 따라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 허용

나. 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1차분 자재·장비 제공에 대한 합의서▲인도·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동측량 일정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도 합의 기한내 남북철도·도로연결을 완료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밝히면서, 가급적 1차분 자재·장비를 확보하고자 주력하였으며, 인도·인수 절차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남과 북은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과 인도·인수 절차를 집중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개요▶

□ 자재 33개 품목(유상공여), 장비 45개 품목(유상공여 : 20, 유상임대 : 25) 총 78개 품목

- 굴착기 등 일부 품목 및 수량, 규격을 조정
- 폭약, 뇌관, 도화선, 천막 등 제외
- 시멘트, 휘발유, 디젤유 등 공사진행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재 제공
- 연유운반자동차 4대 및 화물자동차(15 t, 10 t, 6 t) 238대 제공

* 상기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은 향후 공사진전에 맞추어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자재 · 장비 인도 · 인수 절차 요지>

○ 포장 및 표지 관련

- 자재 · 장비를 포장할 경우, 품목 · 수량 · 물품내역 등과 함께 제공측의 표지를 함.

○ 첫 자재 · 장비 제공 전달일정 확정

- 인도 · 인수 절차 문건 교환 이후 5일 안에 첫 자재와 장비를 장전항과 해주항을 통하여 동시에 북측에 전달

○ 수송경로 관련

- 우선 북측의 원산항 · 장전항과 해주항을 수송경로로 하며 차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육로 및 항구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진행

○ 인수 및 사용결과 통보

- 자재 · 장비의 사용지역, 수량 등을 포함한 인수 및 사용결과를 인수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문건으로 통보
-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 허용

다. 제2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접촉

제2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접촉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공동측량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측량일정 ▲열차 및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자재 · 장비의 품목 및 수량 조정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문제 등을 합의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3국 철도상 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 · 북, 북 · 러, 한 · 러간

양자협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자재·장비의 전체 제공분에 대해서는 레일·침목·고정장치 등에 대한 규격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는 선에서 대처하였다.

반면에 북측은 ▲전체 제공분 자재·장비제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품목·수량 확정 ▲차량 운행합의서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4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동측량절차와 방법을 합의하였다. 차량운행에 관련한 기본합의서와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에 관한 합의서는 추후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요지> —

○ 공동측량구간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으로 200m 길이와 철도·도로 연결 남북관리구역 폭으로 함.

○ 공동측량기간

- 동해선 11.26~11.27간, 경의선 11.29~30간, 매일 09:00부터 15:00까지 진행

○ 공동측량인원

- 쌍방 철도 및 도로전문가 각각 10명, 지원인원 5명 이하로 구성
* 공동측량인원 명단은 측량 하루 전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통보

○ 현지측량자료 상호 교환 및 공동측량결과자료는 측량후 최단기간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상호 통보 확정 등

라.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 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이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의 경우 우리측 구간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의지를 북측에 확인시켜 주면서 남북간 연결을 늦어도 2003년 1월 15일까지 완료한다는 것을 합의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레일·침목 등 궤도부설 관련 2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에 대한 협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마무리와 열차운행합의서에 대한 협의 ▲경의선 임시도로 개통문제 등을 합의 하도록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통신·신호·궤도 등 전체 제공분 자재·장비 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품목·수량 확정에 역점을 두고, 특히 공사 기일이 촉박함으로 교량상판 제공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열차운행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열차운행합의서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쌍방 철도당국간 공동위원회를 구성,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의선 임시도로의 개통문제는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자재·장비문제만 해결되면 개통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수석대표접촉과 궤도, 신호·통신, 도로 등 관련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차량운행합의서와 임시도로개통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여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사이의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2002년 12월 31일 북측이 서명본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하였고 2003년 1월 4일 우리측 서명본을 북측에 전달함으로써 교환절차가 종료되어 현재 우리측 내부의 발효절차를 거치기 위해 관계부처간에 협의 중이다.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전까지 개통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를 해당 부문에 각기 제기함.
- 남과 북은 차량운행기본합의서를 필요한 서명·교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시키며,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2003년 1월 중순에 평양에서 개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설치
-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자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
-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함.
 -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 가능
 -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 변경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자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
-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 납부
- 손해배상
 -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

마.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2003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일정 ▲궤도부설 및 전체 제공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을 타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경의선 철도는 2월 중순에 연결하여,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 분계역인 군사분계선-판문역간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북측에 제공하고, 나머지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시도로를 우선 개통하고, 경의선 철도를 연결한 후에 열차와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 조속히 열차운행기본합의서를 타결하며, 남북간 열차·차량운행사무소도 개설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양측 분계역간 연결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동시에 개통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열차운행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면서도, 경의선·동해선 동시연결문제가 합의된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남북 쌍방은 경의선 철도 개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자재·장비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합의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요지>

-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
 - * 각 구간별 연결시점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협의·해결
- 궤도부설 자재·장비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 1차분 및 궤도부설용 자재·장비 등은 해상과 육로를 통해 제공
- 남과 북은 열차운행합의서를 상호 교환,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 등은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앞으로 진행되는 실무 접촉을 통해 협의·확정

4.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에 따라,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을 200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량장균(건설건재공업성 국장)
대표	박경석(통일부 과장)	최정조(평양전력설계사업소기사장)
	심완섭(국무총리실 과장)	림재학(건설건재공업성 과장)

우리측은 공동조사와 관련한 조사방법, 조사일정, 공동조사단의 구성·운영 등 실무절차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임남댐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남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여 북측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킨 데 대한 보상과 임남댐 공동조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임남댐 공동조사 합의서(안)」과 「조사대상 및 항목에 관한 합의서(안)」, 「사전제공 요구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기술적·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북측에 설명하였다. 또한 북측의 보상요구 주장이 남북간에 합의된 바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공동조사가 급선무라는 입장을 재강조 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데 합의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5.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가.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대표	김중태(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윤영선(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장)	김명철(광명성총회사 대외사업부) 박응철(대외경제위원회 함영지도국)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쌍방당국의 역할문제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공단건설 착공시기, 외부기반시설 건설문제 등에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먼저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들을 신속하게 제정·공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공단 건설과정에서 많은 장비와 자재, 인력이 왕래해야 하는 만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통신, 통관 및 검역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개성공단 착공에 따른 기본방향을 정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과 동시에 진행되는 전력, 통신, 용수 등 하부구조망 건설을 당국이 책임지고 추진하며, 개성공업지구 토지에 대한 임대비와 기존시설물 철거비용은 남측 개발자가 당국의 지원 밑에 부담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 양측은 3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7개항에 이르는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건설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요지>—

-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며,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
-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하고, 규정·세칙 등도 빠른 시일내에 제정, 공포
-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 남측은 전력·통신·용수 등 외부기반시설 건설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최대한 적극 협력
 - 구체적 문제는 사업자간 실무접촉을 조속히 개최하여 협의
- 통행·통관·검역·통신문제는 철도·도로 최초 연결시기에 맞추어 남북 경추위 또는 실무접촉을 통하여 협의·확정
-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 설치
- 실무협의회 2차 회의는 2002년 12월중 서울에서 개최
- 쌍방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

나.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은 200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대표	김중태(통일부 교류총괄과장)	박성일(세관총국 심의원) 최명남(체신성 부국장)

남과 북은 12월 중 개성공단 착공과 관련한 착공식 날짜,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통, 통신·통관·검역 등 제도적 보장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다.

먼저 우리측은 개성공단 조성원가 절감을 위한 북측의 협력을 재강조하며,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 및 세칙의 신속한 제정·공포를 촉구하였다. 또한 공단개발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착공에 필요한 임시통행로 개통 등을 합의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내외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공단개발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반면에 북측은 착공식 날짜 확정, 개발구역안의 하부구조망 건설 추진문제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남북이 12월 25일경 공동으로 착공식을 개최하되, 규모·형식·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자고 요구하였다. 또한 남측 정부가 지체없이 기반시설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기를 촉구하고, 통신·통관·검역합의서는 착공식 날짜를 확정시킨 후에 논의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측은 임시통행로 개통은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법 관련 11개 하위규정은 12월말이나, 2003년 1월초에 공포할 계획임도 설명하였다.

쌍방은 2차례 전체회의와 수차례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과 착공식 일정, 착공전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 개통 등에 합의하고 공동보도

문을 발표하였다.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
 - 이를 위하여 북측은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열고,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
 -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 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전력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요지>—

-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간주하고,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하며, 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북측은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며, 세부 절차는 남과 북이 협의하여 확정
-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 우편 및 전기통신에 대한 상대방의 관련법 및 국제협약·국제관행 존중 및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상호 제공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 공업지구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세관과 시설·장비를 공업지구 내에 설치
- 차량을 지정된 기관(남측:세관, 북측: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
- 물자와 우편물은 공업지구세관, 출입 인원의 휴대품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 검사
- 반출입시 사전에 공업지구 세관에 신고서류를 제출, 출입관세 및 수수료 면제

— <개성공업지구검역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접경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 검역대상 물자·검역기준 및 검역방법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양측 당국이 협의하여 확정
- 북측은 검역소를 공업지구내에 설치
- 검역절차를 신속히 수행하여 물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직원을 파견하여 검역업무 공동 수행 가능
-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

6.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한은 공동조사와 산림조성, 강하천 정리, 홍수조절 댐 건설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하였다.

나.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1차 회의가 개최된 지 1년 8개월 만인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병 칠(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대표	박경석(통일부 과장) 심완섭(국무총리실 과장)	전병 환(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최태 룡(기상수문국 과장)

우리측은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임진강 유역현황에 대한 자료를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임진강 상류지역의 기상·수문자료 등을 11월 10일까지 제

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묘목제공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조림지역의 토양 등에 대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현지조사를 공동조사와 단독조사로 분류하고 공동조사는 남북공동으로 상대방지역을 조사하고, 이후 조사는 자기측 지역을 각자 조사하는 단독조사를 주장하였다.

묘목제공과 관련해서는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남측에서 제공하고 우선 그 일부를 11월중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동조사 문제, 기상·수문자료 통보문제, 홍수예보시설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었다.

그러나 묘목제공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공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묘목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합의된다면, 구체적인 제공시기, 규모는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의 묘목제공이 어렵다면 현재 북측의 임진강 유역 10개 시·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쌍방은 제기된 사안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후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과 한강 하류에 대한 현지조사, 기상·수문 자료 통보, 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
- 쌍방은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대화와 접촉으로 협의·해결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차 회의는 2003년 1월 중 서울에서 개최

7.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는 200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성진(재경부 경제협력국장)	김춘근(민경련 서기장)
대표	엄종식(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구본민(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윤선호(법률가위원회 참사) 김기문(출입국사업국 부국장)

우리측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4개 경협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합의서 및 원산지확인합의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측은 통행합의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포함하여 남북간 통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통행 절차뿐만 아니라 신변

안전 및 무사귀환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원산지확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확인요청기관은 세관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되, 먼저 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를 채택한후 4개 합의서와 함께 발효시키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에 한정하여 출입절차를 규정한 통행합의서를 제시하고, 청산결제 등 남북간 결제업무는 한 개의 은행이 담당토록 하며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문제는 4개 경협 합의서 발표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측은 원산지확인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원산지증명기관의 지정은 내부적인 문제로서 상대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담당기관으로 고집하였다.

쌍방은 통행합의서에 규정될 신변안전보장의 구체적 수준,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방법 및 시기, 일반결제은행 복수지정 문제, 원산지증명기관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8.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가 . 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제1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은 2002년 11월18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강무현(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표	서 호(통일부 과장) 김진홍(국무총리실 과장)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조정철(육해운성 부원)

* 1·2차 양측 대표단 동일

우리측은 ▲남북간 항로개설 ▲운항선박의 안전 및 통신보장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항들과 북측항들 사이의 해상항로설정과 그 운영문제 ▲남과 북의 민간선박들이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목적항까지 가장 가까운 항로를 따라 운항하도록 하는 문제 ▲남과 북의 해운부문 사이의 통신보장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측은 민간선박들의 영해통과문제가 제8차 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인 만큼 해운합의서 본문에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합의서 조항별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민간선박의 영해통과와 관련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

- 쌍방은 해운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난 구조 등 남북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진지하게 협의
- 이번 접촉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제2차 실무접촉에서 계속 협의
- 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중 금강산에서 개최

나 .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제2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은 2002년 12월 25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1차 접촉에서 이미 제시했던 남북해운협력합의서안을 중심으로 협의하되 ▲해상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항구를 추가하는 문제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기하였다.

부속합의서에 포함될 사항에 관해서는 개략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간 해운협력제도의 단계적·점진적 발전방향에 대한 북측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영해통과와 쌍방 항구간의 해상항로설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부속합의서에 관해서도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3차례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수석대표 및 대표접촉을 통해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 구난 등 15개항에 이르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3월중 3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항로대 설정, 통과절차 등 해운합의서 이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들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해운합의서 요지>

○ 적용범위

-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 남북 해상운송 및 항로 개설

-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 보장
-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

○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 남과 북은 일방의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

○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재난이나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및 인명·재난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응급조치
-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 실시

○ 선박의 통신

-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제5절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차례의 적십자회담과 3차례의 적십자실무 접촉을 개최하였으며, 2차례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쌍방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5회), 생사·주소확인(2회), 서신교환(1회) 등에 합의·추진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는 북한이 참가하여 아시아의 43개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회원국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대회가 되었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세계에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 제1차~3차 남북적십자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1차 회담은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2차 회담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차 회담은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박기륜(대한적십자사사무 총장)	단장	최승철(북한적십자회중앙 위원회 상무위원)
대표	고경빈(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김장균(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대표	리금철(북한적십자회중앙 위원회 상무위원) 최창훈(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

* 우리측은 제2차 회담시 김장균 대표를 최기성 이산가족대책 본부 실행위원으로, 제3차 회담부터 박기륜 수석대표를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별보좌역으로 교체, 북측도 최승철 단장을 김경락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최창훈 대표를 리호림 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으로 교체

금강산에서 진행된 3차례 회담을 통해 쌍방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시범적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

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제4차 적십자회담은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 회담은 역사상 처음으로 쌍방 적십자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의미가 있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서영훈(대한적십자사 총재)	장재언(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표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보) 김경웅(대한적십자사 남북 교류전문위원) 송우섭(대한적십자사 남북 교류전문위원) 민병대(대한적십자사 남북 교류국장)	리금철(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일훈(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학철(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리호림(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서기장)

우리측은 이 회담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과제로서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 확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및 면회소 설치·운영 ▲남북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를 제의하였다.

북측은 ▲면회소 설치문제,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 방문단 정례화를 위한 기본합의서 채택문제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확인 문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문제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자기측의 기본입장을 밝혔으며, 입장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계속 협의하였다.

쌍방은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 및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상호 쟁점이 되었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 등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고, 사전에 서로 명단을 교환하였던 제5차 이산가족상봉문제도 확정되었다.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문 요지>

①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 우선 금강산지역에 설치하고,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 협의·확정
- 금강산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는 남북이 공동 건설하며 자재·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
- 금강산 면회소 완공 후 면회 정례화

②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 협의

③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

④ 면회소 설치·운영 등 본회담 합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

⑤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여 9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진행

나. 제1~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0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차례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	리금철(조선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위원)
대표	윤미량(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위원) 유광수(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위원)	함동혁(설계실무자) 류성수(건축실무자)

* 북측은 제3차 실무접촉시 함동혁 대표를 황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교체

제1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쌍방 적십자사 책임자들이 합의한 금강산 면회소 설치·운영문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문제를 협의하고 아울러 전쟁 이후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북측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중 금강산면회소 설치에 관련된 방안들을 집중 제시하였다.

우선 면회소 장소와 관련해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논별구역이라는 구체적 위치를 제시하였고, 면회소의 크기는 약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밖에 지질조사 및 설계문제,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노동력 제공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밖에 면회소 건설을 위해 관계자들을 금강산에 상주시키면서 실무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쌍방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상호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측은 합의사항 전반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만 문제를 국한시킴으로써 실무접촉의 성격을 제한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도를 표출하였다.

몇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남과 북은 기본설계 주체문제, 기존 건물을 이용한 면회 실시 문제를 제외한 면회소 건설문제의 전반에 대해 대략적으로 의견이 접근하였다.

그러나 면회소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났다.

우리측은 금강산의 기존시설을 이용한 면회 실시문제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들도 합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몇 차례의 수정안을 제시, 우리측과 타협점을 모색하였으나 구체적 일자 및 해결방안들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남과 북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제2차 실무접촉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제2차 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은 설을 계기로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규모문제에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측은 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회소 규모는 면회를 실시하면서 증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북측은 처음부터 대규모의 종합건물을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쌍방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남과 북은 제2차 실무접촉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사안에 대해 제3차 실무접촉을 열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2003년 음력 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
- 면회소 규모,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는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
- 2003년 1월중 제3차 실무접촉 개최

2003년 1월 20일 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제3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제1, 2차 실무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던 면회소 규모 문제에 협의를 집중하였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면회소는 1,000명 정도의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충분하며, 구체적인 평수는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에서 설계문제를 논의하면서 협의·확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북측은 면회소를 대규모로 건설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남과 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쟁점사항들을 토의하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제6차 이산가족 상봉실시에 합의하고, 이산가족 및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문제는 차기 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는 등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2000.6.27~30)에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2년여만에 구체적 이행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요지>—

1.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운영

- 금강산면회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함.
- 면회소는 종합센터 형식의 건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되, 연건평 규모는 건설 실무자들이 협의·확정
-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
-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설계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함.
- 면회소 건설은 1년내 완공, 착공식은 4월중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함.
-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 각기 10명 정도씩의 관계자들로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접촉을 2월 10일 금강산에서 진행
- 면회소 운영문제는 면회소 완공 1개월전까지 확정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 제6차 이산가족상봉을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
 - 규모, 절차 등 실무적 문제는 전례를 준용
- 면회소 완공 이전에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

3.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

4.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

3.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가. 제1차 실무접촉

2002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1차 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백기문(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조상남 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대표	박종문(문화관광부 체육국장) 윤강로(대한체육회 사무차장)	리선호(북한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안명국(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대회 준비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 참가종목과 선수단 규모를 확정해 줄 것 ▲성화는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에 채화, 판문점에서 합화하고 생중계를 실시하며 ▲개·폐막식에는 개별입장을 하기로 하고 북측 선수단 경비지원은 긍정적으로 고려하되 기타 참가단 경비는 북측이 부담한다는 내용 등의 우리측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개·폐막식 입장은 시드니 올림픽과 같이 남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하고 ▲성화는 북측이 백두산에서 채화하여 금강산 현대아산측을 통해 남측에 전달하며 ▲선수단 및 응원단의 왕래·체류에 따르는 경비는 남측이 보장해야 한다는 북측의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의 쟁점사항은 ▲개·폐막식 공동입장문제 ▲백두산 성화 채화·봉송문제 ▲응원단 비용지원 문제였는바, 북측은 남북공동입장은 6.15공동선언 취지에도 부합되는 문제임으로 양보가 불가하고, 성화채화도 촉박한 일정을 감안, 북측에서 채화하여 남측에 전달하며, 응원단 비용은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남측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대회가 외국이 아닌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개별입장이 바람직하며, 성화는 조직위 관계자 참관하에 우리측 방송진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채화하고 금강산에서 조직위 관계자에게 인계하며, 응원단 경비지원은 최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조정하자고 대응하였다

남북은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전날의 쟁점사항인 3개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재차 실시하였으나 북측이 본질문제라고 주장하는 개·폐막식 공동입장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제1차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나. 제2차 실무접촉

제2차 실무접촉은 2002년 8월 26일부터 28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남북한은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북측은 공동입장 및 단일기 사용을 재차 강조하였다. 백두산 성화 채화와 관련, 남측의 방송진이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채화된 성화 전달도 금강산을 통해 조직위 관계자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선수단 및 응원단 공동입장과 관련, 남북선수단은 단일복장으로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와 각각의 국기·국호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측은 시드니 올림픽 입장 방식을 고집하고, 응원단 공동입장도 남측이 주최국으로서 OCA와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 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접촉을 통해 쌍방 의견을 조율한 후 전체회의를 개최,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서 제2차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합의서 요지>**

- 북측 선수단, 북측 항공기로 이동, 305명 규모의 선수단 파견
- 남북선수단, 개·폐회식 행사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 선수단 표지판은 「코리아」, 영어로는 KOREA, 복장은 시드니 올림픽 전례를 따름
- 남북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 시상식 시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연주
- 북측은 취주악대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355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고, 응원단은 〈만경봉-92호〉를 타고 원산에서 부산으로 이동, 배에서 숙식하며 경기응원 참가
- 북측은 9.5일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 9.6일 금강산에서 조직위 관계자에게 성화 인계. 또한 10여명의 남측인원이 채화과정 녹화 및 참관이 가능토록 적극 편의제공
- 북측 선수단 체류경비 남측이 부담, 응원단 체류경비는 방문자측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남측이 최대한 편의보장
- 북측의 국기 게양문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과 국제관례에 따름
- 이후 구체적 실무절차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